

3. IMF 체제의 조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 (위기 극복 정책의 한계)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정부의 위기 극복 정책은 긴축 기조하 구조 조정 정책 추진에 치중하여 실물 경제 기반 약화, 외채 관리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부재,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과 사회 통합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소홀이라는 문제점을 파생시킴
- (장단기 정책 과제) 단기적으로는 실물 경제 기반의 약화를 막기 위한 '경기 부양책 보강'과 제2의 외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외채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함.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신산업 정책'과 사회 통합력 제고를 위한 '노동 및 복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위기 극복 정책의 한계와 보완 과제

- (문제점)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추진한 긴축 기조하에서의 구조 개혁을 통한 위기 극복 정책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첫째, 긴축 정책의 추진에 의한 실물 경제 기반 약화
 - 둘째, 외채 관리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미수립
 - 셋째, 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과 사회 통합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소홀
- (정책 보완 과제) 단기적으로는 실물 경제의 기반 강화를 위한 '경기 부양책 보강'과 제2의 외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외채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신산업 정책'과 사회 통합력 제고를 위한 '노동 및 복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실물 경제 기반의 강화와 외환 위기의 재발 방지

- 효과적인 경기 부양책의 병행 추진
 - (現 경기 부양책의 문제점) 정책의 우선 순위가 잘못 설정되어 있고 일부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재정 지출 규모가 미미한 수준
 - (보완 과제) 재정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재원 낭비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구조 조정 플랜의 명확화로 경제 주체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정부 정책의 신속한 추진과 일관성 유지에 의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 무차별적인 무역 금융 허용과 같은 실제적인 수출 증대책 추진과 같은 보완책 필요

- 구체적인 외채 관리 프로그램 마련

- (외채 상환 부담 증가) 98년 10월말 현재 총외채 상황이나 가용 외환보유고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99년~2000년 사이에는 외채만기도래에 따른 부채 상환 부담 증가로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
- (적극적 외채 및 외환정책 필요) 단기적으로는 제 2의 외환위기를 방지하면서 실물경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적정 외환보유고 유지, 적정 환율 유지, 공공부문 외채의 조기 상환 및 중장기 외채 상환 계획 발표, 공기업 민영화, SOC외자 유치, 적정 성장세 유지를 위한 경기 부양책 실시 등의 정책 방안이 요구됨

□ 성장 잠재력 확충과 사회 통합력 제고

- 신산업 정책의 구상과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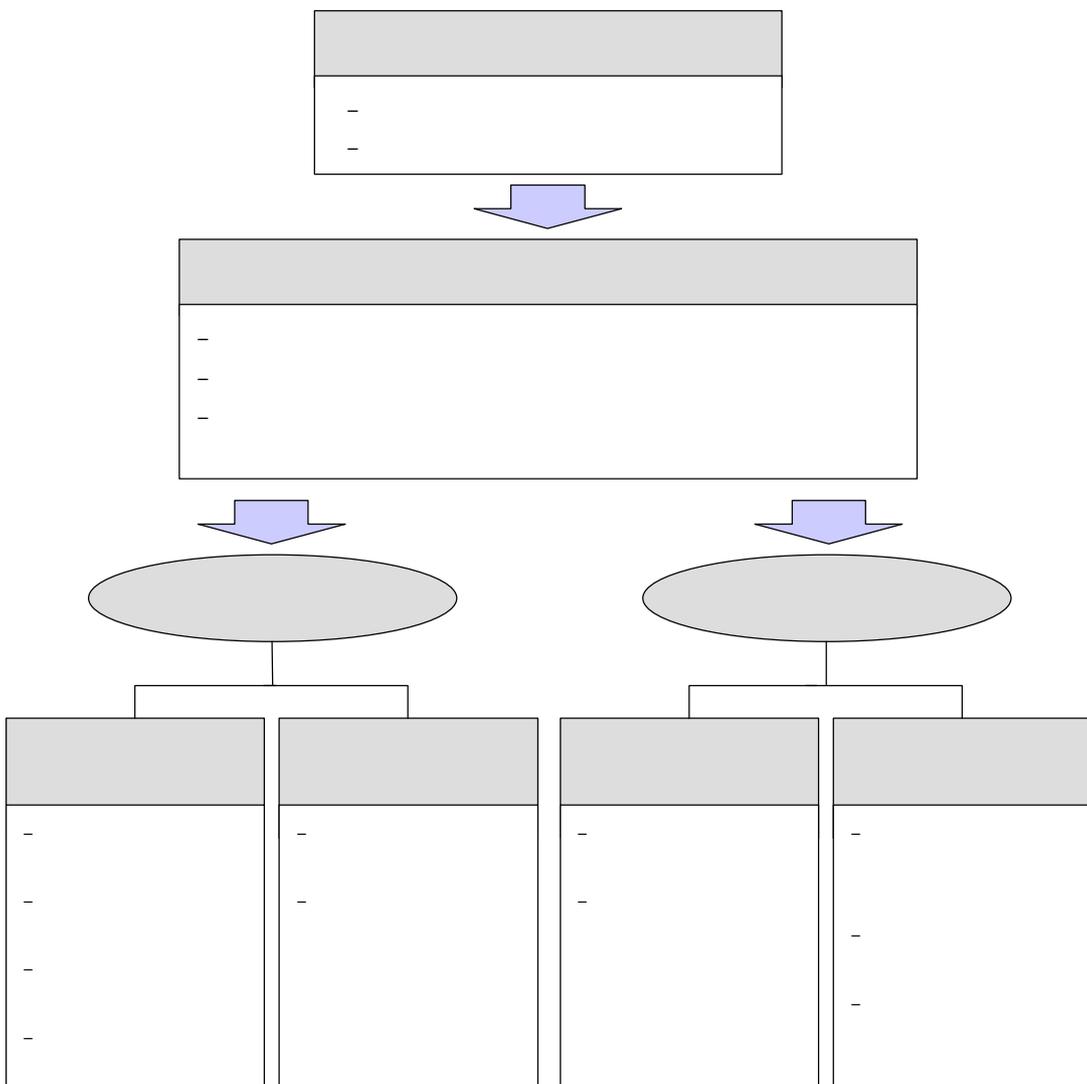
- (필요성) 경제 위기의 근본적 극복을 위한 국내 산업 구조의 취약성 개선과 21세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견실한 산업 기반 구축
- (산업 구조의 취약성 개선) 산업 구조의 취약성 보강을 위해서는 기존 기간 산업의 자율적인 산업 합리화 추진, 재래 산업과 첨단 기술과의 융합화 등을 통한 산업 내 구조 고도화 달성, 수입 유발적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부품 중간재 산업 육성, 금융·유통·통신과 같은 서비스업 발전을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유기적 연계성 강화 등을 추진
- (21세기 환경 변화에 대응) 새로운 환경 변화에 원활히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인적 자본과 기술 과학 수준 및 문화적 특성을 감안한 한국형 지식 기반 산업(신 유망 산업) 발굴, 정보 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한 경제 내 지식 기반 강화, 과학 기술 및 교육 정책 중심으로의 정부 행정 체제 혁신, 지적 소유권 보장과 벤처 자본 확대 등을 통한 신기술의 상업화 촉진, 산업 지원과 개입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한 개입 법정주의 채택과 같은 정책을 활용

- 사회 통합력 제고

- (필요성) 소득 불평등 확대, 노사 분규 증가와 같은 사회 통합력 약화라는 구조 조정 추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의 재도약 도모
-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의 사회 안전망 구축) 각종 생계 지원 및 실업 급여 지급을 직업 훈련 등과 연계시켜 실직자나 극빈 계층의 재취업을 원활히 하는 생산

- 적 복지(workfare)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
- (생산적 노사 관계 형성) 종업원의 참여와 협력을 유인하는 '인적 자원 관리'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종업원의 권한과 책임을 증대시키는 '종업원 참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적 노사 관계 형성을 지원
 - (국민 의식 개혁) 21세기 지력 사회를 대비하는 새로운 정신적 지향 가치로서 인간성 회복을 바탕으로 하는 의식 개혁 운동을 제2 건국 차원에서 추진

<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보완 과제 >



(유 병 규 bkyoo@hri.co.kr, ☎724~4060)

4.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나리오

- 외환위기 경험국가의 사례에서 보면 금융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추진, 적절한 경기 부양책의 실시,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력의 제고가 위기 극복의 관건임
- 향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시나리오에는 이러한 세가지 요인이 충족되면서 외환시장의 안정이 유지되고 新산업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산업경쟁력이 제고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함
- 구조조정期 (1998~1999년) : 구조조정에 따라 경제 안정은 크게 진전되나 환율 하락과 선진국들의 경기 하강,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수출 경쟁 등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성장률은 0~3%대의 저조한 수준 유지
- 경쟁력 확충期 (2000~2002년) : 구조조정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세계 경기 회복세 등 전반적인 경제 여건의 개선으로 경기는 본격적인 회복기 진입
- 안정적 성장期 (2003년 이후) : 5% 이상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성장기 진입

□ 외환위기 경험 국가의 사례

- 90년대 대표적인 위기 발생국인 스칸디나비아 3국과 멕시코의 경우,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위기 해결을 위해 외환유동성 확보 및 외자 도입에 역점을 두고 있음
 - 거시경제지표의 안정과 함께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

<경제 위기 극복 정책의 특징>

	위기 극복 정책의 개요	위기 해결 비용 (GDP대비)
스웨덴	- 부실 자산의 신속한 정리에 중점 - 부실 금융기관 지원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 도출	6%
노르웨이	- 시장 기구를 통한 금융기관 선별 지원	4%
핀란드	- 전반적인 경기 회복 지연으로 위기 극복 비용 과다 지출 - 부동산 가치의 하락이 지속되어 담보자산의 시장 가격 형성 곤란	9%
멕시코	- 긴축 정책 유지(통화/재정) -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 성공적인 노사정 합의 운용 - 중장기 개발계획의 제시	15%

-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에 주는 시사점

-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수 조건임 :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그만큼 대외 신뢰도 회복이 지연될 뿐 아니라 위기 해결 비용이 증가함. 따라서 구조조정을 위한 규범 마련은 물론, 구조조정의 효과가 조속한 시일 내에 可視化 되도록 해야 함
- 적절한 경기 부양책이 뒷받침되어야 함 :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함(핀란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위기수습 비용이 증가함)
- 사회 통합적 합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함 : 핀란드의 경우 스웨덴과 달리 정치권과 일반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 구조조정이 아직 종결되지 않음

□ 시나리오의 전제 조건

-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며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두 가지의 추가 조건이 필요함
 - 新산업 정책의 추진 :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이로 인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외환위기가 초래된 원인 중 하나임. 따라서 국내 산업 구조의 개편과 지식 산업 기반의 확충을 근간으로 하는 新산업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상수지의 흑자 기조의 정착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적극적인 외환 및 외채 정책의 추진 : 현재는 외환 시장과 외채 구조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나 향후 외채의 만기 상환 일정이 도래함에 따라 외채 상황이 국민경제에 부담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향후 우려되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외환보유고의 확충이 필요함

<위기 극복을 위한 전제 조건>

외환위기 국가의 공통적인 전제 조건	①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 ② 적절한 경기 부양책 실시 ③ 사회 통합력의 제고
한국 상황에서의 추가적인 전제 조건	④ 新산업정책의 추진 ⑤ 적극적인 외환 및 외채 정책의 추진

□ 위기 극복 시나리오의 단계별 구성

- 위의 전제 조건들은 다음의 단계로 구분되어 실시되거나 또는 효과를 발휘할 것임

<위기 극복 시나리오의 단계별 구성>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이후
전제 조건	구조조정 추진	새로운 규범과 제도의 도입 → 기존 관행과 제도에 接木		구조조정 효과의 可視化			
	경기 부양책	구조조정 지원 및 성장 기반 붕괴 방지		경기 회복 정도에 따른 적절한 통화/재정 정책 사용			
	사회통합력 제고	실업 급증으로 인한 사회 불안 방지		생산적 노사관계의 정착으로 실업 증가 억제			
	新산업정책의 추진	기존 산업의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식 기반 산업의 구축		전체 산업의 지식 기반化	
	외환/외채 정책	제 2의 외환위기 방지		외채 상환 및 출자 전환으로 국민경제 부담 경감			
시나리오의 단계별 구성		구조조정기		경쟁력 확충기		안정적 성장기	

① 구조조정기 (1998~1999년)

- 구조조정에 따라 경제 안정은 크게 진전되나 환율 하락과 선진국들의 경기 하강,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수출 경쟁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성장률은 0~3%대의 낮은 수준 유지

② 경쟁력 확충기 (2000~2002년)

- 구조조정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세계 경기 회복세 등 전반적인 경제 여건의 개선으로 경기는 본격적인 회복기 진입
- 구체적으로 지식 산업의 토착화 등 新산업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사회통합력이 실질적으로 제고되는 시기임

③ 안정적 성장기 (2003년 이후)

- 5% 이상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성장기 진입
- 내수의 안정적인 증가세 지속과 경상수지의 균형 수준 유지
- 환율과 금리도 지속적인 하락세
- 반면, 연평균 5%대의 高실업은 지속

□ 향후 국내 경제의 전개 과정

- 경기 저점 통과 : 99년 상반기 중 예상
 - 최근 산업 생산이 증가세로 반전되고 소비 및 투자 지표의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각종 경제 지표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재경부나 한국은행도 우리 경제가 99년 3~4월 경에 경기 저점을 지나 회복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
- 지표상 경기 회복 시작: 99년 말~ 2000년 초
 - 경기가 저점을 지나 경제성장률이 (+)로 전환하는 시점은 99년 말 경이 유력함
- 체감 경기 회복 시점: 2000년 초
 - 기업들의 투자 심리 및 민간의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시점인 체감 경기 회복 시점은 지표상 경기 회복 시점보다 1분기 정도 후행할 것으로 전망
- 외환위기 이전 시점에서의 소득 수준 회복 : 2002년
 - 외환위기 반발 이전인 1997년 소득 수준(1인당 국민소득 9,511달러)은 2002년에 가서야 회복될 전망
- 국민소득 10,000달러 회복 시점: 2003년
 - 1인당 국민소득이 96년 수준인 1만 달러를 회복하는 시점은 2003년으로 전망

< 향후 한국 경제 전망 >

	1997(p)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경제성장률 (%)	5.5	-6.8	0.3	3.3	5.2	5.4	5.6
1인당 국민소득 (달러)	9,511	6,463	6,888	7,747	8,863	9,702	10,514
민간소비 (%)	3.1	-13.9	0.5	4.5	4.8	5.2	6.8
설비투자 (%)	-11.3	-45.8	0.6	5.6	6.2	7.4	8.3
건설투자 (%)	2.7	-22.0	3.4	10.3	6.9	7.6	6.1
경상수지 (억달러)	-86	395	196	58	38	3	0
소비자물가 상승률 (%)	4.5	7.7	2.1	5.4	3.8	3.7	3.8
회사채수익률 (기간평균,%)	13.4	15.0	10.5	10.5	10.3	10.2	10.0
원/달러 환율 (기간평균)	950.5	1,450	1,300	1,150	1,070	1,030	1,000
실업률 (연평균, %)	2.6	7.2	8.0	6.7	6.0	5.3	5.0